

## 우리나라는 저출산함정에 빠진 것인가?\*

### - 저출산함정 가설의 검증과 함의 -

엄동욱\*\*

우리나라는 2002년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 이하)로 진입한 후 합계출산율이 평균 1.2 이하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초저출산 상황이 향후 지속된다면 인구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여파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이런 초저출산 추세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저출산함정 가설(low fertility trap hypothesis)을 제기한 Lutz, Skirbekk and Testa(2006)의 논의를 소개한다. 그들은 크게 인구학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과 같이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저출산함정의 존재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저출산함정에 빠져 있는가? 먼저 고령화 가설의 경우 출생아수와 고령화간 부(-)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이상자녀수가 2.2~2.3명이지만, 실제자녀수는 그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이상자녀수가설도 지지된다. 상대소득가설의 경우, 류덕현(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령 계층 간 상대소득이 출산율에 정(+의 효과를 보여 상대소득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제한된 영역에서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출산율이 대체수준까지 회복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재확인시켜준다.

키워드 : 출산율, 초저출산, 저출산함정 가설, 상대소득가설

\* 본 논문은 2009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한국개발연구원 김정호 박사님과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남겨진 오류나 개선사항은 필자가 계속 고민할 몫이다.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edwmidas@ser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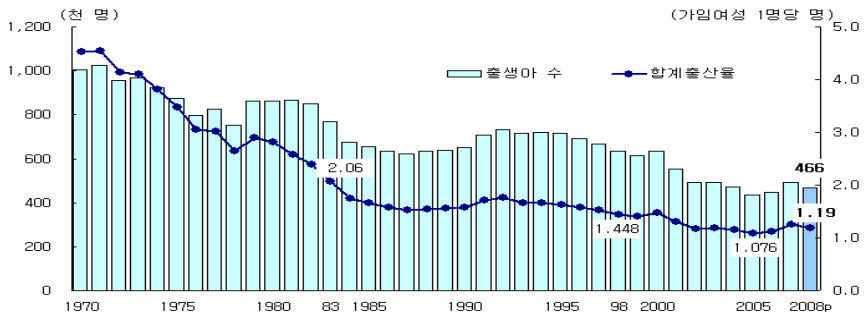
## I.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최근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고령화의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에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2년에 소위 초저출산(lowest low fertility) 국가로 진입했기 때문이다.<sup>1)</sup> <그림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반에는 합계출산율이 4 이상인 고출산 국가였으나, 출산율이 계속 저하하여 1983년에 합계출산율이 2.1 이하인 2.08명으로 진입하였다. 이후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였고 1998년에 1.45명 수준이 되었다. 그 후 불과 4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1.17명 수준으로 저하하여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했다.<sup>2)</sup>

가장 최근의 통계라고 할 수 있는 2008년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1.19명으로 감소하였다. 2002년 이후 출산율이 미미하게 증가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출산율의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출산율이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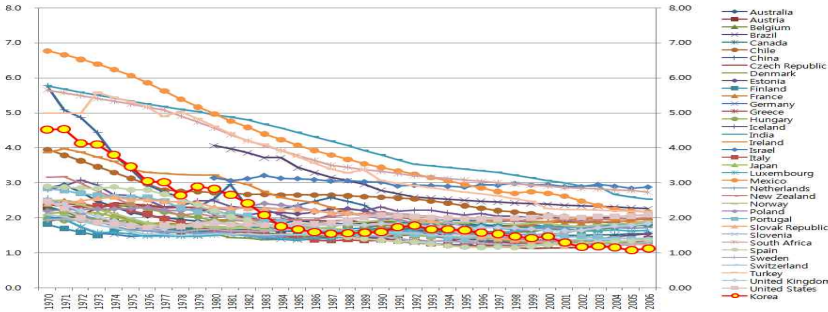
<그림 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주: 통계청(2009), “2008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통계청 2009년 2월 26일 보도자료, p.3에서 재인용.

- 1)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1.3 이하인 경우를 초저출산이라고 하는데, 2002년부터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었다. 저출산율에 대한 용어로 대체출산율 이하를 의미하는 대체수준 이하 출산율(below-replacement fertility, TFR<약 2.1), 저출산율(very low fertility, TFR<1.5), 초저출산율(lowest-low fertility, TFR<1.3)이 있다.
- 2) 2009년 5월 2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보건통계 2009’에 대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은 2007년 기준 1.2명으로 193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그림 2> 국가별 출산율 추이



자료: <http://stats.oecd.org/WBOS/Index.aspx?Datasetcode=CSP2009>

저하하고 있는 추세이다.<sup>3)</sup> 그 심각성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명확해지는데, <그림 2>를 보면, 우리나라가 2002년 초저출산국가가 되면서 세계 최저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이미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했다. 일본,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동유럽 국가들이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출산율의 하락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미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에 대한 연구들은 다수 존재한다. 김승권(2004)은 최근의 출산율 저하가 미혼자의 결혼연장 또는 독신생활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향후 출산율의 전망도 병행하고 있는데, 젊은 미혼남녀의 가치관이 개인주의화되는 경향을 감안할 때 출산율 회복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박경애(2007)는 2006년에 합계출산율이 1.13으로 2005년 1.08의 최저치에서 다소 증가한 결과에 대해 인구동태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출산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합계출산율의 증가는 여성의 초혼과 첫째아 출산의 연기가 주춤해지면서 주로 30대 초반의 첫째아 출산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김두섭(2007a, 2007b, 2008)은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부들에게 자녀수를 줄이고자 하는 동기가 출산수준 저하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상의 연구들은 초저출산의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제공하지 않았다.

한편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저출산 추세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 최경수(2003)

3) 물론 최근 출산율의 추세를 보면 약간의 증가세가 나타난 적도 있다. 출산율 증가의 원인을 분석한 이삼식(2008)에 따르면, 가임여성인구의 증가가 그대로 출산율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lt;표 1&gt; 합계출산율과 초저출산으로의 이행연도, 1970~2005

국가	합계출산율(TFR)						TFR 저하 시점	
	1970	1980	1990	2000	2005	2006	TFR<2.0	TFR<1.3
Australia	2.86	1.89	1.90	1.76	1.79	1.81	1978	-
Austria	2.29	1.65	1.46	1.36	1.41	1.41	1973	-
Belgium	2.25	1.68	1.62	1.66	1.76	1.80	1973	-
Brazil	-	4.06	2.79	2.39	2.29	2.27	-	-
Canada	2.33	1.68	1.71	1.49	1.54	1.54	1973	-
Chile	3.95	2.72	2.59	2.08	1.97	1.96	2003	-
China	5.78	2.54	2.10	1.89	1.81	1.78	1992	-
Czech Republic	1.91	2.10	1.89	1.14	1.28	1.33	1983	1995
Denmark	1.95	1.55	1.67	1.77	1.80	1.85	1973	-
Estonia	-	2.02	2.05	1.39	1.50	1.55	1991	1998
Finland	1.83	1.63	1.79	1.73	1.80	1.84	1969	-
France	2.48	1.95	1.78	1.87	1.92	1.98	1975	-
Germany	2.03	1.56	1.45	1.38	1.34	1.33	1971	1991
Greece	2.39	2.21	1.39	1.27	1.34	1.41	1983	1998
Hungary	1.97	1.92	1.84	1.33	1.32	1.35	1980	1999
Iceland	2.81	2.48	2.31	2.08	2.05	2.07	1985	-
India	5.77	4.95	3.80	3.07	2.61	2.54	-	-
Ireland	3.87	3.23	2.12	1.90	1.88	1.90	1992	-
Israel	-	3.14	3.02	2.95	2.84	2.88	-	-
Italy	2.43	1.68	1.36	1.26	1.32	1.35	1977	1993
Japan	2.13	1.75	1.54	1.36	1.26	1.32	1975	2003
Korea	4.53	2.83	1.59	1.47	1.08	1.13	1984	2002
Luxembourg	1.98	1.50	1.62	1.78	1.62	1.64	N.A.	-
Mexico	6.77	4.97	3.44	2.70	2.21	2.17	-	-
Netherlands	2.57	1.60	1.62	1.72	1.71	1.72	1973	-
New Zealand	3.17	2.03	2.18	1.98	1.97	2.01	1982	-
Norway	2.50	1.72	1.93	1.85	1.84	1.90	1975	-
Poland	2.20	2.28	1.99	1.37	1.24	1.27	1990	2002
Portugal	2.83	2.18	1.56	1.56	1.41	1.36	1983	-
Slovak Republic	2.40	2.31	2.09	1.29	1.25	1.24	1992	2000
Slovenia	2.12	2.11	1.46	1.26	1.26	1.31	1981	1995
South Africa	5.65	4.56	3.32	2.90	2.78	2.73	-	-
Spain	2.90	2.22	1.36	1.23	1.35	1.38	1982	1993
Sweden	1.94	1.68	2.14	1.55	1.77	1.85	N.A.	-
Switzerland	2.10	1.55	1.59	1.50	1.42	1.44	1972	-
Turkey	5.00	4.63	3.07	2.27	2.19	2.18	-	-
United Kingdom	2.43	1.90	1.83	1.64	1.79	1.84	1974	-
United States	2.48	1.84	2.08	2.06	2.05	2.10	1973	-

주: 1970년부터 2006년까지의 자료이며, N.A.는 미확인 자료로서 1970년 이전으로 추정됨.

자료: <http://stats.oecd.org/WBOS/Index.aspx?Datasetcode=CSP2009> 및 핀란드 통계청.

는 출산시기의 연장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그 중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즉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 증가, 임금-연령 곡선의 상승에 의한 출산시기 지연의 가능성이 출산을 하락의 주원인이라고 하고 있다. 남재량·이인재(2004)는 가구의 합리적 의사결정의 결과로서 출산율의 변화를 이해 하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추세가 크게 2가지 경로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보고 있다. 첫 번째 경로는 실물자본 축적과 이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의 축소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하락하는 경로이다. 두 번째 경로는 부모의 인적자본 투자가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감소하게 되는 경로이다. 즉 남녀 임금격차의 축소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그리고 여성의 고학력화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한 이유라고 보았다.

한편 류덕현(2007)은 출산에 대한 결정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결정 등은 ‘집단적인 성격’(collective property)을 띠고 있다고 보고 집계변수를 사용한 거시적 수준에서의 분석을 강조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의 노동시장임금의 상승효과가 청년층의 출산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남성소득은 반대로 중고령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또한 상대소득가설의 검증을 통해서 세대간 상대소득의 차이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청년층의 경우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거시 변수를 이용한 다른 연구들이 있는데, 오유진·박성준(2008)은 거시 변수를 이용한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여건이 좋아지면서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결국 출산율에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으며,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여건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박추환·한진미(2008)는 출산, 고용과 성장 간 상호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적 VAR(Vector Auto-Regression) 기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은 성장과 고용에 사전적 선행변수로서 그 역할이 미미하고, 여성고용과 성장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후행변수라는 점을 보여주었다.<sup>4)</sup>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여전히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수준으로의 저하에 대해 그 본질과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sup>5)</sup> 이에 본 연구는 저출산율이 지속되는 현상을 저출산함정(low fertility trap)으로 이해

4) 한편 미시 변수를 이용한 연구로 전현배·이인재(2009)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구조와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부모와의 동거가 기혼자녀 부부의 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부모와의 동거와 출산율 간에 나타나는 정(+)의 관계가 선별과정(sorting process)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5) 물론 출산력 결정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존재한다. 이를 종합하여 분석한 미국 국립과학원의 출산력 연구의 종합모형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권태환·김두섭(2002), pp.107-108 참조.

하고자 한다.<sup>6)</sup> 결국 초저출산율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로서 저출산합정에 진입하게 되면 특단의 노력이 없다면 다시는 헤어 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에 빠져있다고 보는 것이다.<sup>7)</sup> 만약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라고 검증된다면 보다 현실적인 전망에 기초하여 향후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sup>8)</sup>

따라서 본 연구는 Lutz, Skirbekk and Testa(2006, 이하 LST)의 저출산합정 가설에 주목한다. 필자가 이는 한 출산율 저하의 원인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율 지속현상에 대해서 종합적인 측면에서 구조화하고 연구가설로 체계화한 작업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를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그들의 논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엄정한 가설검증의 틀로서 정교화하기에는 아직 문제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곧바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검증가능한 연구가설로 차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ST의 저출산합정 가설이 제시하는 함의는 현 시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들의 논의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본 연구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동시에 기존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가설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sup>9)</sup>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 LST의 저출산합정 가설과 연관된 선행연구들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합정 가설이 검증되는지를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살펴본다. 마지막 제4장에서 주요 결과와 더불어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언급한다.

- 
- 6) 최근 정성호(2009)는 인구변천에 대한 연구에서 LST의 '저출산 올가미 가설'을 소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trap이라는 의미가 한 번 빠지게 되면 헤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보다 강한 의미를 가진 '함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Lutz, Skirbekk and Testa(2006)도 trap라는 표현을 쓰게 된 이유로 정부정책상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 의도하지 않았지만 야기되는 상태라는 점, 그리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탈출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 7)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이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요인에 대해서 전광희(2006, 인구대사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고 본다. 가령 무자녀비율의 상승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초저출산율을 조래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 8) 일반적으로 장래인구추계에서는 출산율의 향후 전망치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 Lutz(2008)는 현실적인 전망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전광희(2006)는 장래인구추계에서 출산율 가정치를 조정했을 때, 출산율 저하로 야기될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 9) 물론 새로운 데이터와 방법론을 활용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성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해 익명의 심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필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성에 대한 기존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최근 연구성과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개별 가설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통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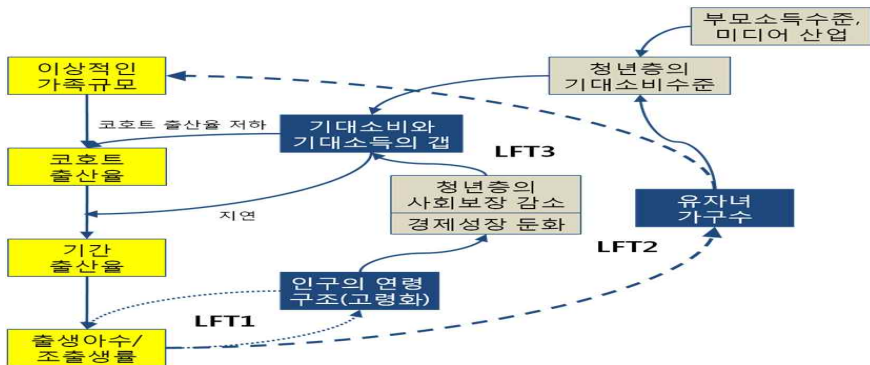
## II. 저출산함정 가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저출산함정 가설은 LST의 연구에 기초한다. 그들은 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저출산함정(low fertility trap)'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sup>10)</sup> 저출산이 지속될 때 그 결과는 매우 파괴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그 심각성에 비추어 한계가 있다.<sup>11)</sup> 더구나 저출산함정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저출산 현상이 스스로 그 강도가 더욱 강해지는, 즉 출산율 저하현상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일종의 자기강화(self-enforcing) 과정이 존재한다면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LST의 저출산함정 가설에 대해서 살펴보자. LST는 크게 인구학적, 사회적, 경제적 경로와 같이 3가지 경로에 의해 저출산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저출산함정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그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 <그림 3>과 같이 제시된다.

이를 각각 별도의 하부 가설로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가설은 인구학적 메

<그림 3> LST의 저출산함정 가설



주: LST(2006), p.175에서 재인용.

10) 이는 Lutz and Skirbekk(2005)에서 논의했던 저출산국가에서의 템포효과(tempo effect)를 강조 하면서 구상하게 된 것이다. 즉, 저출산함정이 존재한다면 출산율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단기 출산율 제고정책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Lutz and Skirbekk(2005)를 참조. 더불어 Lutz(2006)는 유럽에서 초저출산 현상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 지속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Lutz(2006)을 참조.

11) 초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McDonald(2008)의 논의를 참조.

커니즘에 의해 발생하는 경로에 대한 가설이다. <그림 3>의 가는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그림 2의 좌측 하단, LFT1으로 표시)인데, 출생아수의 저하 또는 조출생률의 저하는 곧바로 인구고령화로 이어지며 그 여파는 다시 출생아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출생아수의 저하는 성비의 문제가 있지만,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그대로 가입여성의 수를 감소시키고 그 결과 다시 출생아수의 감소로 이어져 저출산 구조를 강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최근 출산율이 감소한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 주된 원인으로 가장 처음 언급되는 것이 주출산연령층 여성인구의 감소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sup>12)</sup>(통계청(2005) 참조)

두 번째 가설은 사회적 측면에서 저출산이 반복되는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소위 사회적 합리성(sociological reasoning)의 문제로 <그림 3>의 굵은 점선으로 표시된 경로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생아수의 저하 또는 조출생률의 저하가 유자녀 가구 수의 저하를 초래하고 그 결과로 이상적인 자녀수(ideal family size)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합리성이 반영되는 것은 바로 이상적인 자녀수를 결정하게 과정에서 바로 사회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난다고 본 것이다. 즉 출산의 규범과 가치에 있어 사회적 학습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sup>13)</sup>

LST는 청년층이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자신의 가족 또는 주변의 가족에게서 보이는 가구규모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결국 최근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2자녀 또는 1자녀 가구가 일반화되기 때문에 향후 이상적인 자녀수도 그에 맞게 조정된다는 논리이다.

한편 세 번째 가설은 다른 가설에 비해 다소 복잡한데, Easterlin(1980)의 상대소득가설에 입각하여 저출산의 경제적인 측면(경제적 합리성, economic rationality)에서 저출산합정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한다.(<그림 3>의 실선부분) 이 가설에서도 출발은 다른 가설과 동일하다. 출생아수의 저하는 유자녀 가구수의 감소를 유발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라 하더라도 자녀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의 자녀의 소비성향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한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자녀들은 성장과정에서 소비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소비수준은 더욱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LST는 시간이 지날수

12) 따라서 첫 번째 가설은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인구구조에 대한 단순계산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인구의 연령구조가 어떻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경로임에는 틀림이 없다.

13) 이상자녀수는 실제로 자녀수를 결정하는 주요인은 아니지만,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장래의 실질적인 자녀출산을 예측할 수 있는 간접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상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세계양식, 노동의 질, 남아선호, 가족주의 등을 지적하고 있다.(김승권(2006, 인구대사전), pp.574-580 참조)



록 청년층의 기대소비수준이 높아지게 된다고 보고 있다.<sup>14)</sup>

청년층의 기대소비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기대소득수준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즉 출생아수의 저하로 초래된 인구고령화는 경제성장의 저하를 야기하면서 이는 곧 청년층의 사회보장 수준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 청년층의 소득수준은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청년층의 기대소득과 기대소비의 갭은 더욱 벌어지게 된다. 결국 청년층의 기대소득-기대소비간의 갭이 증가하게 된다. 기대소득은 계속 저하하는 데, 기대소득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LST는 이러한 소득과 소비 간 갭이 두 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우선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코호트 출산율이 저하하는 경로이다. 이는 아무리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자녀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제약조건 하에서는 무리하게 자녀수를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코호트 출산율의 감소와 다른 경로로서 출산을 연기하는 경로가 존재한다. 즉 코호트 집단의 출산율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와 더불어 청년층이 추가적인 자녀를 출산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출산시기를 연기한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이상의 논리가 Easterlin(1980)의 상대소득가설에 근거하고 있지만, LST는 Easterlin의 상대소득가설에서 두 번째 가설인 세대규모효과에 대한 부분은 일부 국가의 세대 변화에서만 적용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논의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LST는 상대소득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상대소득 지표를 제시하였다. 즉 Easterlin(1980)이 제안한 바와 같이 청년층의 소득으로서 25-34세 정규직 남성근로자의 소득을, 그리고 부모계층의 소득으로서 45-54세 정규직 남성근로자의 소득을 구한 다음, 청년층 소득을 부모계층의 소득을 나눈 값을 상대소득지표로 본다. OECD의 자료를 활용하여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영국의 1974년부터 1994년까지의 추이를 보여주면서 그 상대소득지표가 4개국 모두 1보다 낮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sup>15)</sup>

Easterlin의 논의에 따르면 이 지표가 1보다 높으면 출산율을 높여지며, 반대로 1보다 낮으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LST는 위 4개국 모두 이 시기에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상대소득가설이 검증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최근까지의 상대소득지표가 보여주는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 동일하게 1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14) 대표적인 사례로 LST는 과거에는 자동차가 사치재였다고 하면, 최근 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할만한 점은 미디어 산업의 발달이 이런 소비성향을 더욱 촉진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15) LST(2006), p.183의 <그림 3>을 참조.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LST는 상대소득지표가 1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기 어려운 이유로 미디어 산업의 발전에 따라 청년층의 기대소비수준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메커니즘은 결과적으로 저출산율이 지속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 2>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LST가 개별 가설에 대해서 그 명칭을 정의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각각 ‘고령화가설’, ‘이상자녀수가설’ 그리고 ‘상대소득가설’로 명명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각 가설별로 주요 논거와 영향관계의 원인, 과정, 결과를 구분할 수 있다. 앞서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대소득가설은 다른 가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이므로 적용되는 변수나 영향관계도 복잡하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합정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LST가 지적인 바와 같이 고령화가설은 쉽게 산술계산으로도 검증가능하며, 이상자녀

<표 2> 저출산합정 가설의 구조

	가설1(LFT1) 고령화가설	가설2(LFT2) 이상자녀수가설	가설3(LFT3) 상대소득가설	
주요 관점	인구학	사회학	경제학	
논거	인구고령화 가속	이상자녀수의 감소	기대소득-기대소비의 갭 증가	
영향 관계	원인	출생아수/조출생률 저하	출생아수/조출생률 저하	
	과정	고령화 촉진 = 인구의 연령구조 (고령자비율) 변화	유자녀가구수 감소	<기대소득경로> 인구고령화 촉진 → 경제성장 둔화 → 청년층의 사회보장 감소 → 청년층의 기대소득 수준 감소 <기대소비경로> 유자녀가구수 감소와 부모소득 증가 (미디어산업 발달) → 청년층의 기대소비 수준 증가 ⇒ 청년층의 기대소비-소득의 갭 증가
	결과	출생아수/조출생률 저하	이상자녀수 감소	코호트출산율 감소, 기간출산율 감소
검증방법	고령화와 출생아수(조출생률)간관계	이상자녀수와 실제자녀수간 관계	상대소득가설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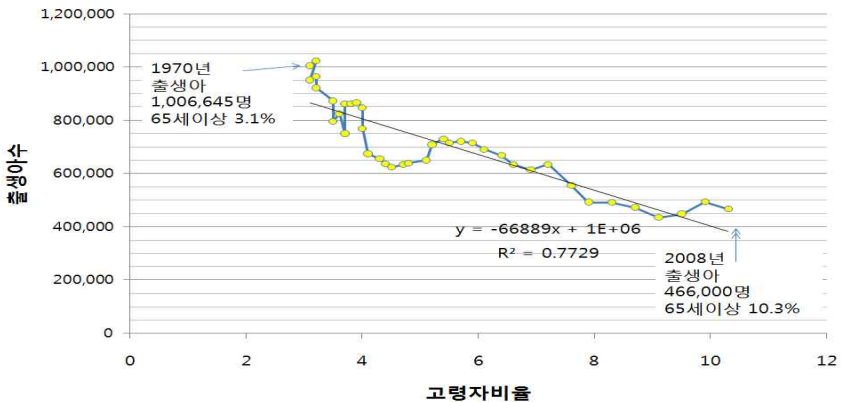
수가설 또한 이상자녀수의 추이와 실제자녀수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한편 상대소득가설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부모세대의 소득과 자녀세대의 소득 또는 소비수준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LST도 직접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sup>16)</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이지만, 국내 연구 중 류덕현(2007)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상대소득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sup>17)</sup>

### III. 우리나라의 저출산함정 가설 검증

#### 1. LFT1 : 고령화가설

고령화가설은 크게 2개의 경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첫째, 출생아수와 인구고령화의 관계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사망률의 변화와 인구가동이다. 먼저 사망률은 우리나라의 경우 크게 변화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고령화가설 검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림4> 고령화와 출생아수



자료: KOSIS, 인구통태건수 및 동태을 추이 등

16) 앞서 각주 13의 예와 같이 상대소득가설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엄밀한 검증을 시도하기 어렵다. LST는 2006년의 연구이후 후속 연구에서 일부 가설검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필자가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자세한 내용은 LST(2007)을 참조  
 17) 후술하겠지만, 류덕현(2007)의 연구도 LST가 제안한 Easterlin의 상대소득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증한 것은 아니다.

다. 한편 인구가이동, 특히 이민과 관련해서는 최근 이민자의 증가세가 보이고 있으나 전체 인구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가설검증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 <그림 4>를 보면 고령화와 출생이수의 지난 30년간의 추이를 알 수 있다. 1970년 65세 고령자비율은 3.1%, 출생이수는 백만명 수준이었다. 2008년 현재 고령자 비율은 10%를 넘어섰고 출생이수는 46만 6천명수준으로 낮아졌다. 일정시기에 고령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출생이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고령화와 출생이수 간의 관계가 부(-)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가설은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LST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변수간의 시계열 상관관계를 통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sup>18)</sup>

## 2. LFT2 : 이상자녀수 가설

두 번째 가설은 이상적인 자녀수와 관련된 것이다. 이상자녀수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의 규모(수)'를 의미하며, 특정사회의 구성원들이 자녀 가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현존자녀수와 관계없이 몇 명의 자녀를 두면 이상적인가의 주관적인 자녀수로써 자녀규모에 대한 가치관의 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이상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족규범과 성번호, 혼인규범, 생태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거론할 수 있다.<sup>20)</sup>

물론 이상자녀수는 다른 인구변수들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변수인데, 즉 최근 저출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상자녀수는 2.2~2.3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3> 참조) 1994년과 1997년의 조사결과도 각각 2.2명, 2.3명인 것으로 보면 아직까지 이상적인 자녀의 수는 2명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초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대를 낳기도 한다.<sup>21)</sup>

18) 익명의 심사자는 단순 고령자비율과 출생이수의 단순 상관관계를 가지고 가설을 검증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인구의 연령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출생율과 사망률, 그리고 인구가이동을 고려해야 하는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망률과 인구가이동에 있어 큰 변화가 없다면(오히려 사망률은 인구고령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생율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출생이수와 고령자비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시계열적 상관관계에서는 시차(time lag) 등과 같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엄밀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19) 이상자녀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2006년 자료가 최신 자료이다. 동 자료는 3년마다 실시되는데, 현재 가용한 자료는 2000년, 2003년, 2006년 자료이다.

20) 동 지표는 전국 15~44세 유배우 부인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20) 이상자녀수의 영향요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승권(2006, 인구대사전), pp.574-580 참조.

21) 높은 수준의 이상(희망)자녀수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는 코호트 완결가족의 규모가 높기 때문에 초

&lt;표 3&gt; 최근 이상자녀수의 추이

연도		2000	2003	2006
계		2.2	2.2	2.3
연령계층별	15~24세	2.1	2.2	2.1
	25~29세	2.1	2.2	2.1
	30~34세	2.2	2.3	2.2
	35~39세	2.3	2.3	2.3
	40~44세	2.3	2.3	2.3
교육정도별	초졸이하	2.3	2.4	2.2
	중학교	2.3	2.3	2.3
	고등학교	2.2	2.2	2.3
	대학이상	2.2	2.3	2.2
현존 자녀수별	0명	2.2	1.9	2.0
	1명	2.0	2.1	2.1
	2명	2.3	2.3	2.3
	3명	2.6	2.5	2.5
	4명이상	2.7	2.6	2.7

주: 15~44세 유배우 부인을 조사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2008), 한국의 사회지표.

그러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이 높을수록 이상자녀수가 높아진다고 해도 그 수준이 연도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학력일수록 이상자녀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상자녀수의 안정적인 추세가 현실적인 자녀수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최근 자녀양육으로 인한 직접비용이 증가하고, 기회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더욱 1~2자녀 가족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LST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학습과정을 통해 이상자녀수의 감소도 조만간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자녀수가 설이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전광희(2006, 인구대사전), p.1125 참조.

22) 익명의 심사자는 고령화 가설을 포함해서 이상자녀가설에 대해서 기존의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반면, 본 연구의 논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도 이상자녀수에 비해 실제자녀수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라고 판단되며, 현실적으로 이상자녀수에 비해 실제자녀수가 계속 저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가 문제제기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 3. LFT3 : 상대소득가설

상대소득가설은 앞서 LST의 논의와 같이 개인의 출산력이 자신의 절대소득 보다는 자신이 속하는 준거집단 내에서의 상대소득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즉, 상대소득과 출산율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자녀양육비와 소득의 불가분성 또는 기호(taste)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으며, 세대간(inter-generational) 상대소득가설과 사회적 상대소득가설로 나누어진다.<sup>23)</sup>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세대간 상대소득가설은 Easterlin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부모의 생애소득을 준거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생애소득이 일정하다고 할 경우 부모의 생애소득이 높을수록 출산력과 여타 소비지출이 감소한다고 본다. 즉 부모의 생애소득과 자신의 생애소득을 비교할 때 그 차이가 클수록 산출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부모의 생애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의 기대소비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전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상대소득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sup>24)</sup> 류덕현(2007)은 Butz and Ward(1979)의 논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데

<표 4> 상대소득가설 검증

설명변수	(1)	(2)	(3)	(4)	(5)
상수항	4.6531*** (1.2892)	4.6281*** (1.4630)	7.6827*** (0.4421)	5.3764*** (1.1771)	9.5561*** (0.5369)
$K \cdot \ln W_f$	-0.6763*** (0.0703)	-0.6802*** (1.2892)	-0.4500*** (0.0452)	-0.9274*** (0.0881)	-0.6278*** (0.0557)
$K \cdot \ln Y_m$	0.3182*** (0.1109)	0.3222** (0.1476)	-	0.4205*** (0.1043)	-
상대소득1	-	-0.0049 (0.1052)	0.1380* (0.0774)	-	-
상대소득2	-	-	-	1.5500*** (0.4811)	1.0448*** (0.4993)
$\overline{R^2}$	0.8661	0.8609	0.8524	0.8873	0.8575

주: 1) ( ) 속의 값은 White 이분산성교정 표준오차임.

2) \*, \*\*, \*\*\*는 각각 10%, 5%, 1%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자료 : 류덕현(2007), p.63의 <표 10>을 재인용.

23) 상대소득가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acunovich(1998)과 류덕현(2007)을 참조.

24) 당초 LST에 따라 기대소득 및 기대소비와 관련된 세대간 또는 연령계층별 자료를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현 단계에서는 그에 합당한 변수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복잡한 영향경로 각각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못했다.

이터(1975~2004)를 대상으로 상대소득가설을 검증하였다. 그는 상대소득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연령대별 코호트 규모의 상대적 크기(상대소득1)와 연령대별 남성의 연간소득의 상대적 크기(상대소득2)를 사용하였다. 상대소득2의 경우, 가령 20~24세 남성의 연간소득을 40~49세 남성의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을 상대소득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청년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소득이 크면 클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sup>25)</sup>

추정결과, 상대소득1보다는 상대소득2가 유의한 결과를 보여준다. 추정결과는 <표 3>와 같다. 여기서 종속변수는 출산율이고, 설명변수는 시간당 여성임금( $K \cdot \ln W_f$ )과 연간 남성소득( $K \cdot \ln Y_m$ )이다.<sup>26)</sup> 시간당 여성임금의 추정계수는 부(-)의 값이 나타난다. 이는 여성임금이 상승할 경우 정(+)의 소득효과보다 부(-)의 대체효과가 커서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을 보여준다. 연간 남성소득의 경우, 정(+)의 추정계수 값을 보여준다. 상대소득1은 물론 상대소득2의 추정계수 값은 모두 정(+)의 값으로 나타나 상대소득가설이 유효함을 보여준다.

LST의 제안과 같이 기대소득-기대소비의 갭을 중심으로 출산율과의 관계를 다루지는 못했지만, 연령계층별 소득차이를 반영한 상대소득이 출산율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LST가 의도한 바와 거의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상대소득가설도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율 지속현상에 대해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기존 국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저출산함정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저출산함정 가설을 제기한 LST의 논의를 가급적 자세히 소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설, 이상자녀수가설, 상대소득가설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검토하였다.

첫 번째 가설인 고령화가설의 경우, 인구의 연령구조를 대표하는 고령화 추이가 출생아수의 감소와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두 번째 가설인 이상자

25) 류덕현(2007)은 상대소득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신가계경제학의 가설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데, 신가계경제학의 가설과 상대소득가설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류덕현(2007), pp.51~63을 참조.

26) 설명변수들은 아내가 일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여성 고용률 변수인  $K$ 가 종속변수인 출산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구변수를 사용한 것이다.(류덕현(2007), p.58의 각주 16을 참조)

녀수가설의 경우, 이상자녀수가 2.2~2.3명 수준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1~2자녀 가구가 널리 확산되면서 현존자녀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상자녀수 가설도 지지된다고 보았다. 마지막 세 번째 가설인 상대소득가설의 경우, 류덕현(2007)의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상대소득가설이 타당한 것이라고 보았다. LST가 제안한 바와 같이 기대소득과 기대소비의 갭을 측정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세대간 또는 연령 계층간 상대소득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함정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LST가 제안한 가설이나 검증방법들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저출산함정의 3가지 경로 모두 저출산 추세가 계속 지속되는 방향으로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검증결과는 제한적이지만, 현 단계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초저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LST의 논의는 최근 초저출산국가에서의 출산율 저하현상이 지속되는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출산율의 복원 또는 증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다양한 원인들을 인구학적, 사회학적, 경제학적 관점에서 출산율 저하로 귀결되는 일종의 악순환 과정을 묘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저출산함정에 대한 논의 속에서 그 원인을 추적해 나갈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그리고 정책개입 시 초점을 맞추어야 할 요소들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LST의 '저출산함정가설'은 그 개념적 유용성에 비해 일련의 가설을 검증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논의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LST의 논의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서 주요 변수들의 관계는 동일한 시점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차(time lag)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세대간 차이가 반영되는 일련의 경로들은 한 세대를 약 20년으로 보았을 때 현재의 출산율이 20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간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더 엄밀한 가설 검증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LST의 저출산함정 가설이 인구학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을 모두 포괄한 가설로서 종합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지만, 각 요인마다 세부적인 영향관계를 살펴볼 때 과연 LST가 언급한 요인이나 변수들로만 저출산함정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LST의 저출산함정가설은 출산율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결과 변수가 이상자녀수, 기간출산율, 코호트출산율, 출생아수(조출산율)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LST의 논의속에서는 가족형성 또는 결혼의 메커니즘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 즉 이상자녀수가설이나 상대소득가설의 경우 관련변수 모두 결혼의 결정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데, 가령 최근 결혼지연 또는 만혼화의 추세가 저출산의 주요인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각 가설의 영향경로에서 출산이전에 가족형성(결혼)에 대한 결정요인으로서 이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셋째, LST의 논의가 상당히 방대한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좁아 저출산에 대한 비관적 전망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정책개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데 훌륭한 도구이지만, 과연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그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저출산함정 가설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한편, 이를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기존 연구를 활용하여 검토하는데 그쳐 보다 엄밀한 가설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sup>27)</sup>

따라서 향후 연구는 이러한 개념적 틀을 보다 정교화하고 기존의 인구변천 또는 출산력변천 이론과 연관된 이론 개발과 실증분석이 더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고 가설검증을 위한 방법을 일부 제한하였지만, 적절한 해결책인지는 의문시된다.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권태환, 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김두섭 (2007a) 《IMF 경제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 집문당.  
 김두섭 (2007b)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회, 30(1): 67-95.  
 김두섭 (2008) “출산수준과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최근 변화,” 《저출산대

27) 익명의 심사자들은 모두 가설검증에 있어 분석자료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출산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를 다른 최근 논의(LST, 2006)를 소개하고,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게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심사자들의 지적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하기 어려웠다.

- 책 포럼》 제1차 포럼 발표자료.
- 김승권 (2004)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회, 27(2): 1-34.
- 남재량, 이인재 (2004) “한국의 출산율 하락추세에 대한 연구,” 《2004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pp.1-37.
- 류덕현 (2007) “출산율과 여성노동공급에 대한 거시적 실증분석,” 《공공경제》 한국공공경제학회, 12(1): 39-74.
- 박경애 (2007) “최근의 출산력과 정책적 함의,”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회, 30(3): 137-156.
- 박추환, 한진미 (2008) “출산, 고용, 성장 간 상호연관성 연구: 구조적 VAR 모형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8(1): 1-26.
- 오유진, 박성준 (2008) “저출산의 경제학적 분석,” 《한국경제학보》 연세경제연구소, 15(1): 91-112.
- 이삼식 (2008) “최근 출산수준 증가원인,” 《저출산대책 포럼》 제1차 포럼 발표자료.
- 전광희 (2006)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출산력 가정치의 설정,”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회, 29(2): 53-88.
- 전현배, 이인재 (2009) “가족구조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9(1): 1-25.
- 정성호 (2009) “산업국가에서의 제2차 인구변천,”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회, 32(1): 139-164.
- 최경수 (2004) “출산율 하락 추이에 대한 분석,”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회, 27(2): 35-59.
- 통계청 (2005) “출생아수 감소요인 분석,” 통계청.
- 통계청 (2009) “2008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2009년 2월 26일.
- 한국인구학회 편 (2006) 《인구대사전》 통계청.
- Butz, W.P. and M.P. Ward (1979) “The Emergence of Countercyclical U.S. Ferti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69(3): 318-328.
- Easterlin, R.A. (1980) *Birth and Fortune : The impact of numbers on personal welfare*, 2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utz, W. (2006) “Chapter 5: Alternative Paths for Future European Fertility: Will the Birth Rate Recover or Continue to Decline?” pp.83-100

in *The New Generations of Europeans: Demography and Families* in the Enlarged European Union, edited by W. Lutz, R. Richter and C. Wilson, Laxenburg, Austria: IIASA and Earthscan.

Lutz, W. (2008) “Has Korea’s Fertility Reached the Bottom? The Hypothesis of a ‘Low Fertility Trap’ in parts of Europe and East Asia” *Asian Population Studies* 4(1): 1-4.

Lutz, W. and V. Skirbekk (2006) “Policies Addressing the Tempo Effect in Low-Fertility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1(4): 699-720.

Lutz, W., V. Skirbekk and M.R. Testa (2006) “The Low-Fertility Trap Hypothesis: Forces that May Lead to Further Postponement and Fewer Births in Europe”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2006: 167-192.

Lutz, W., V. Skirbekk and M.R. Testa (2007) “New Empirical Evidence on The Low-Fertility Trap Hypothesis” Extended Abstract prepared for the PAA 2007 Annual Meeting.

Macunovich, D.J. (1998) “Fertility and the Easterlin hypothesis: An assessment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1(1): 53-111.

McDonald, P. (2008) “Very Low Fertility: Consequences, Causes and Policy Approaches”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6(1): 19-23.

[2009. 4. 9 접수 | 2009. 7. 15 채택]